

현안과 과제

■ 경제적 행복의 장애 요인
- 노후준비 부족, 그리고 기본소득

Executive Summary

□ 경제적 행복의 장애 요인 : 노후준비 부족, 그리고 기본소득

■ 개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욕구는 커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만족도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바, '경제적 행복', '기본소득' 등 현안과 관련한 국민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 경제적 행복의 장애 요인

먼저,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은 '노후준비 부족'(34.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6개월 전(28.8%)과 1년 6개월 전(24.8%)에 비해 '노후준비 부족'이라는 응답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일자리 부족'(35.3%)이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고, '30대'는 '주택문제'(31.2%), '40대'는 '자녀 양육/교육'(30.0%), '50대'는 '노후준비 부족'(50.6%), '60세 이상'도 '노후준비 부족'(66.9%)이라고 응답했다. 둘째, 계속해서 부진한 소비를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소득 감소'(22.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자녀교육비 부담'(19.3%)과 '가계빚 부담'(18.0%), '노후준비 부족'(16.9%), '일자리 불안'(14.4%), '전월세 상승'(9.3%) 등의 순이었다. 셋째, 올해 하반기 경기와 관련하여, 상반기보다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56.2%로 과반을 넘었다. 올해 하반기 한국경제의 회복을 가로막을 가장 큰 장애요인은 '국내소비 부진'(54.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올해 하반기에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경기활성화 대책'(47.4%)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깝게 많았으며, 이어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26.2%), '주택가격 안정화'(15.7%), '규제개혁 통한 투자활성화'(10.7%)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에 반대 의견이 75.3%로서 찬성(20.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고, 지난번 스위스의 투표결과(반대77%, 찬성23%)와 흡사했다. 국민들은 적절한 '기본소득' 금액에 관하여 '월50만원'이라는 응답이 39.6%로서 가장 많았으며, '월100만원' 32.9%, '월30만원' 27.5%의 순으로 응답했다.

■ 시사점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이 '노후준비 부족'이라는 응답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고령친화적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노후소득의 지원을 늘리기 위한 재정 보강 등 준비도 필요하다.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률이 21%에 불과하여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아니지만, 불평등의 심화와 경기부진의 지속, 그리고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부진 등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1. 개요

○ 소득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욕구는 커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만족도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바, ‘경제적 행복’, ‘기본소득’ 등 현안과 관련한 국민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함

- 조사 개요

- 기간/주관 : 2016년 6월 14일 ~ 6월 23일
- 대상/방식 :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12명
(지역별 최소할당과 인구비례에 의한 배분) / 전화설문조사
- 오차범위 : 95%신뢰수준에서 $\pm 3.08\%p$ (응답률 15.4%)

- 응답자 특성

구분	성별		연령별					결혼유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기혼	미혼	이혼·시별
명	505	507	120	262	252	257	121	715	272	25
%	49.9	50.1	11.9	25.9	24.9	25.4	12.0	70.7	26.9	2.5

구분	직업별						소득수준별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전문직	공무원	무직, 기타	2천 미만	2천~4천	4천~6천	6천~8천	8천 이상
명	487	166	202	6	67	84	324	423	183	44	29
%	48.1	16.4	20.0	0.6	6.6	8.3	32.0	41.8	18.1	4.3	2.9

구분	자산규모별					학력별			
	1억 미만	1억-3억	3억-5억	5억-10억	10억 이상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명	391	378	138	47	33	69	259	647	37
%	39.6	38.3	14.0	4.8	3.3	6.8	25.6	63.9	3.7

2. 경제적 행복의 장애 요인

○(경제적 행복의 장애물)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은 ‘노후준비 부족’(34.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6개월 전(28.8%)과 1년 6개월 전(24.8%)에 비해 ‘노후준비 부족’이라는 응답률이 계속 더 높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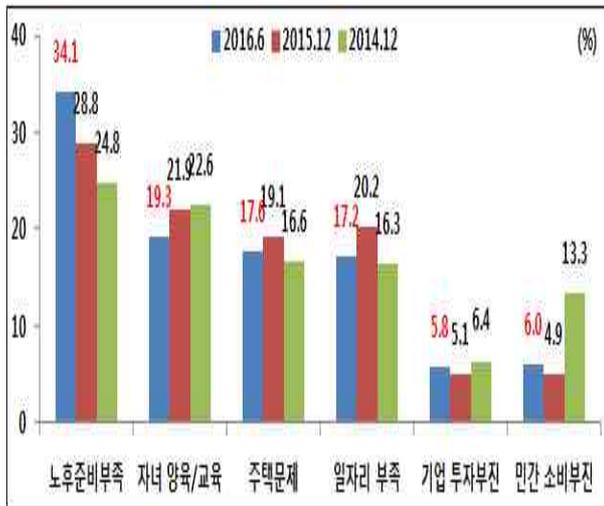
- 이어서, ‘자녀양육/교육’(19.3%)과 ‘주택문제’(17.6%), ‘일자리 부족’(17.2%)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일자리 부족’(35.3%)이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고, ‘30대’는 ‘주택문제’(31.2%), ‘40대’는 ‘자녀 양육/교육’(30.0%), ‘50대’는 ‘노후준비 부족’(50.6%), ‘60세 이상’도 ‘노후준비 부족’(66.9%)이라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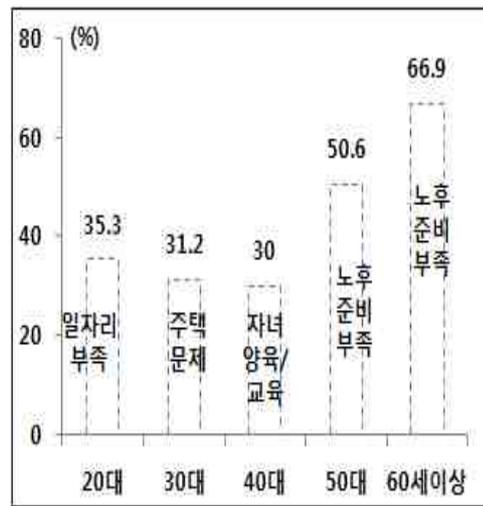
· 20대에서 60대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제적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인도 일자리(20대) → 주택(30대) → 자녀교육(40대) → 노후준비(50대 이상) 등으로 달라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경제적 행복의 장애요인’도 달라지고 있음

· 또한, 나이가 많아질수록 ‘노후준비 부족’에 대한 응답률이 높아지고 있음

< 경제적 행복의 장애물 >



<연령별 경제적 행복의 장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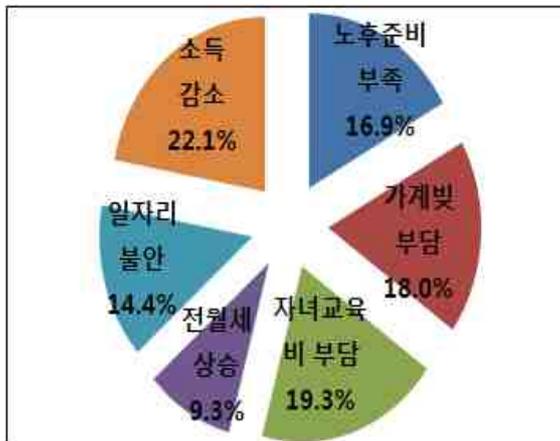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20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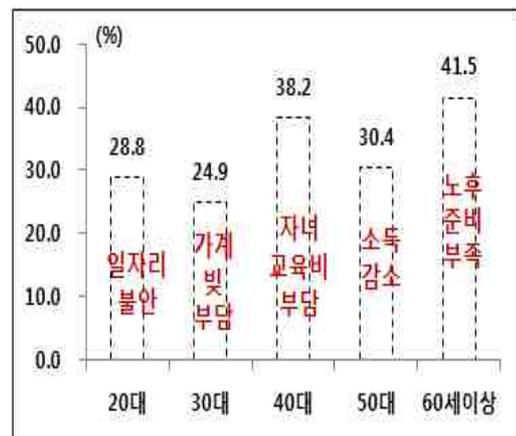
○(소비 위축의 요인) 소비를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소득 감소’(22.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6개월 전(16.5%)에 비하면 ‘소득 감소’라는 응답률이 더 높아지고 있음

- 이어서, '자녀교육비 부담'(19.3%)과 '가계빚 부담'(18.0%), '노후준비 부족'(16.9%), '일자리 불안'(14.4%), '전월세 상승'(9.3%)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음
- 연령별로 나눠서 보면, '20대'는 '일자리 불안'(28.8%)이 소비 위축의 가장 큰 요인이었으며, '30대'는 '가계 빚 부담'(24.9%), '40대'는 '자녀교육비 부담'(38.2%), '50대'는 '소득 감소'(30.4%), '60세 이상'은 '노후준비 부족'(41.5%) 이라고 응답

< 소비 위축의 요인 >



< 연령별 소비 위축의 요인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20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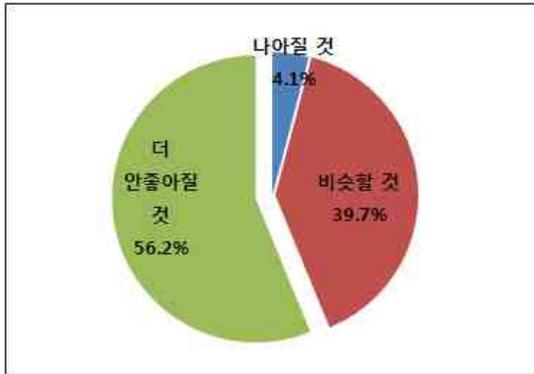
○(올해 하반기 전망) 올해 하반기 경제는 상반기보다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56.2%로 과반을 넘었음

-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39.7%,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4.1%에 불과했음
- '더 안 좋아질 것'(56.2%)이라는 응답은 '자영업자'(68.1%)와 '전문직'(83.3%), '고소득층'에서 특히 더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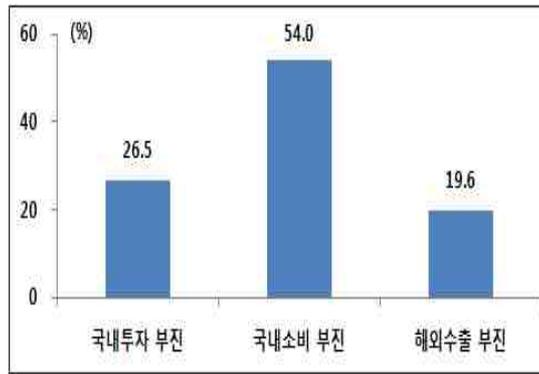
○(하반기 경기회복의 장애요인) 올해 하반기 한국경제의 회복을 가로막을 가장 큰 장애요인은 '국내소비 부진'(54.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국내투자 부진'(26.5%)과 '해외수출 부진'(19.6%)의 순이었음

- 올해 하반기 경기회복의 가장 큰 장애요인을 '국내소비 부진'(54.0%)이라고 꼽은 응답은 '전문직'(66.7%)과 '공무원'(62.7%)에서 특히 더 높았음

< 올해 하반기 경제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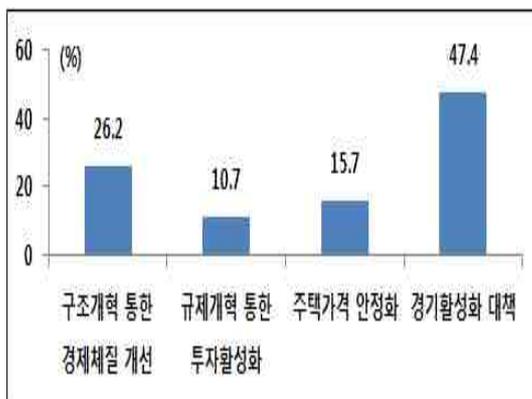
<올해 하반기 경기회복 장애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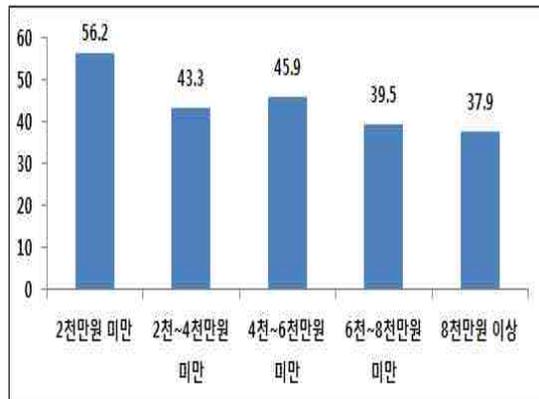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올해 하반기에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경기활성화 대책'(47.4%)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깝게 많았음. 현재의 국내외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반영

- 이어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26.2%), '주택가격 안정화'(15.7%), '규제개혁 통한 투자활성화'(10.7%)의 순이었음
- 소득수준별로 세분해보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경기활성화 대책'에 대한 응답률이 낮아지고, 반대로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경기활성화 대책'에 대한 응답률이 높아짐
-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일수록 지금 당장의 일자리와 소득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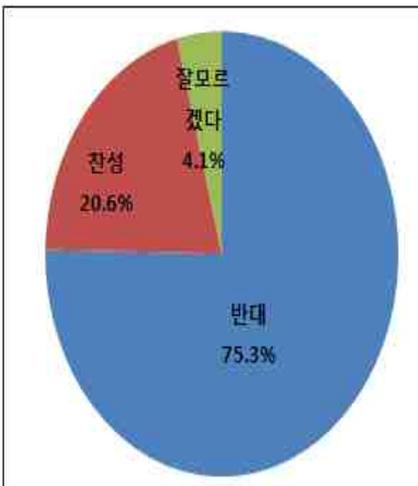
<소득별 '경기활성화' 응답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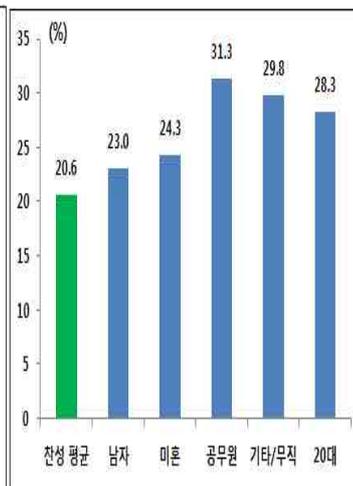
○(기본소득¹) 찬반 여부)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의 결과와 비슷하게, 우리 국민들도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75.3%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찬성한다'는 20.6%에 그쳤음. 그밖에 '잘 모르겠다'는 4.1%

- 국민 누구에게나 일정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결국 기존 국민연금의 축소나 세율 인상 등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기본소득'에 찬성한다(20.6%)는 의견은 성별로는 '남자'(23.0%), 결혼여부별로는 '미혼'(24.3%), 직업별로는 '공무원'(31.3%)과 '기타/무직'(29.8%), 연령별로는 '20대'(28.3%)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대체로 젊은 20대 미혼 남성을 중심으로 직업별로는 '기타/무직'과 같은 일자리 취약계층에서 상대적으로 '기본소득'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기본소득'에 반대한다(75.4%)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기혼(77.2%), 전문직(83.3%), 50대(81.3%), '연소득 8천만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89.7%), '자산 10억원 이상'의 부유층(84.8%)에서 높게 나타남
 - 대체로 사회 기득권층으로 분류되는 고소득, 고자산, 전문직, 50대, 기혼자 등의 그룹에서 '기본소득'에 반대한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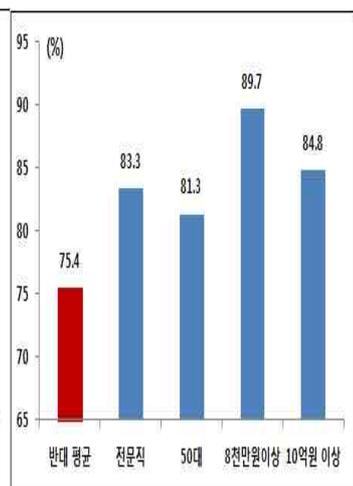
<기본소득 국민투표 찬반>



<찬성 많은 그룹>



<반대 많은 그룹>



1) '기본소득'(Basic Income)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으로, '사회적 부의 형성에 기여한 개인에게 주는 정당한 대가'(강남훈, 2016)라고 정의됨.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는 2009년 이후 한신대 강남훈 교수 등이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기본소득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강남훈 외, 2014), 『기본소득 운동의 쟁점과 대안사회』(강남훈, 2014), '한국에서 단계적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정모형'(강남훈, 2015) 등의 저서와 논문을 참고하기 바람.

○(기본소득 적정 금액) 우리 국민들은 적정한 '기본소득 금액'에 관하여 '월 50만원'이라는 응답이 39.6%로서 가장 많았으며, '월100만원'은 32.9%로서 두 번째로 많았고, '월30만원'은 27.5%로서 가장 적었음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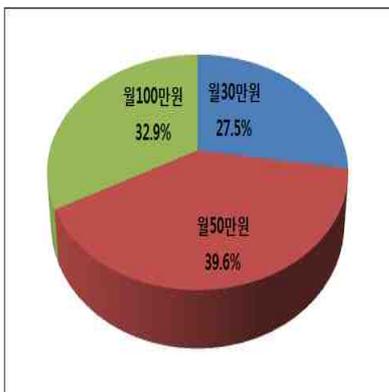
- 국민 누구에게나 일정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으로는 성인 기준 월 얼마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50만원(39.6%) > 100만원(32.9%) > 30만원(27.5%)의 순으로 응답했음

· 기본소득에 관한 강남훈 교수(2015)³⁾ 등의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성인기준 월30만 원 정도를 적정한 기본소득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적정한 기본소득'은 월5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함

- '적정 기본소득' 금액이 100만원이라는 다소 진보적 성격의 응답(평균 32.9%) 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그룹은 남성(36.9%), 30대(38.3%)와 40대(40.8%), 직장인(37.3%)과 자영업자(40.0%), 소득 6천만원~8천만원 미만(40.6%)의 중소득층, 자산 3억~5억원 미만의 중자산층이었음

- '적정 기본소득' 금액이 30만원이라는 다소 보수적 성격의 응답(평균 27.5%) 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그룹은 여성(29.6%), 20대(37.5%)와 60대 이상(35.8%), 주부(36.8%), 중졸(37.0%)과 대학원 이상(41.4%), 자산 10억 원 이상의 고자산층(40.9%)이었음

<적정 기본소득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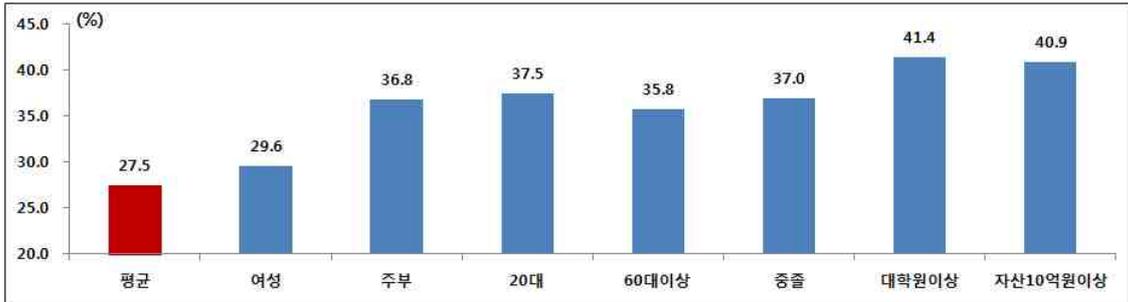
< 100만원(적정 기본소득) 응답률이 높은 그룹 >



2) 세 가지 선택지(30만원, 50만원, 100만원)에 대한 응답의 가중평균값은 61만원이지만, 선택지를 3가지로 임의로 제시했다는 점과 샘플링 가중치 등을 감안하면 '적정한 기본소득의 평균' 값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

3) 강남훈, '한국에서 단계적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정모형', 2015.

< 30만원(적정 기본소득) 응답률이 높은 그룹 >



3. 시사점

- 국민들의 '노후준비 부족'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바, '노후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의 안정성 제고, 고령친화적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 대책의 마련이 요구됨
 - '노후준비 부족'이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응답이 해마다 증가하고, 고령층일수록 '노후준비 부족'의 응답률도 높아지는바, '소득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지원하며, 직업훈련과 실업수당 등 '고용 관련 사회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함
- 하반기 경기와 관련하여 '경기활성화 대책'을 주문하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국민들은 현재의 경기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국민들은 중장기적인 '경제의 체질 개선',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 등의 응답에 비해, 단기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함
 - 하반기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경우에도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에 발맞춰, 취약계층의 소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는 복지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기본소득'에의 찬성이 21%에 불과하여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아니지만, 불평등의 심화와 경기부진의 지속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선제적 준비가 필요함

- 스위스의 국민투표 결과 (찬성 23%, 반대 77%)와 비슷하게 우리 국민들도 아직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가 강한 편은 아니지만, 불경기의 지속과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부진 등에 따라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가 점차 강해질 것임에 대비해야 함

김동열 정책조사실장 (02-2072-6213, dykim@hri.co.kr)